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64호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36호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 공모사업 재공고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46호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공고 17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29호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0호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3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1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36호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 공모사업 재공고

인천문화예술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도시)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 증대를 위하여 「2019 인천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인천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8. 7.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 중

다. 사업장소 : 인천광역시 소재 전시실 등

※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폐막식(일시 : '19. 12. 6. 장소 : 부평아트센터 공연장) 관련
부평 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사용 가능(기간 : '19. 12. 3~12. 8.)

라. 사업내용 : 인천문화예술단체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지원

※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에 따라 중국·일본은 교류대상에서 제외

마. 지원분야 : 미술 분야

바. 사업유형

- 해외 예술단체를 인천으로 초청하여 개최하는 전시 등 예술프로젝트
- 인천에서 해외 예술단체와의 공동 창작·발표사업 등

※ 반드시 해외예술단체(중국·일본 제외)가 함께 참여해야 함

사. 사업비 : 50백만원 ※ 자부담(시비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아. 지원규모(내용) : 1개 단체(전시 개최비, 관계자 초청비 등)

지원항목 예

- 항공료(화물운송비), 해외초청자 체제비(숙박비, 일비·식비)
- 작품제작비, 홍보비, 사례비, 장소대관료, 임차료, 통·번역 등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나. 신청자격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단체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8. 7(수) ~ 8. 13(화)

나. 접수기간 : 2019. 8. 12(월) ~ 8. 13(목) / 2일간(09:00~18:00)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본관 5층 / 440-4023)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소속 직원)

※ 우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법인(단체)·개인 소개서,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 자료포함) 7부

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1부

라. 기타 서류(활동실적자료, 해외단체 초청 및 참가확인 증빙 서류 등)

※ 서류 제출시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포함)을 지참하고 위의 “가~라”의 신청 서류가 저장된 USB 별도 제출

5.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발표(프리젠테이션)·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 3단계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목표 적절성, 사업내용 적절성, 예산계획 적정성, 사업실행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 효과성 등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발표 및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일사업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원 받고 있는 법인(단체)인 경우 지원 배제

6.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 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 나.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다.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함
- 라.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7. 유의사항

- 가. 자부담은 시비보조금액의 최소 10%이상 부담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 라. 제공모시에도 신청한 법인·단체가 1개일 경우 적격심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 마. 심사결과 적격 단체가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바. 선정된 법인(단체)은 총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자.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440-4023)에 문의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붙임1】 지원신청서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공모 지원신청서

신청개요	사업명			
	총사업비	원(100%)	보조금 (지원신청금)	원(%)
			자부담	원(%)
	초청단체	국가(도시)	단체명	
	사업기간	2019. . . ~ 2019. . . (일)		
	사업장소	<input type="checkbox"/> 확정 <input type="checkbox"/> 미확정		

신청대상	단체	단체명			
		주소	우:		
		전화		FAX	
		대표자	성명		☎이동전화
			E-mail		
		실무자	성명		☎이동전화
E-mail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본 단체(개인)는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공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개인정보 수집목적>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평가 및 지원사업 관련 홍보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름, 연락처, 학력 등 제출내용	<개인정보 이용방법> 인천광역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업무에만 사용

상기 기재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부서	접수자
	2019.			

【붙임2】 위임장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공모 지원신청
위임장**

대표자	법인또는 단체명		법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에 지원 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3】 사업계획서**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소개

1) 기획의도(추진배경)

2) 사업목적

3) 초청단체명

4) 초청단체역할

3.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 사업장소

3) 사업대상

※ 예상 참여자수 : 명

4) 사업내용

○

○

○

4. 세부 추진계획

- ※ 구체적인 세부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재
- ※ 이해를 도울 이미지 첨부 가능

5.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및 홍보 등을 위한 추진일정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세부 추진 내용	비 고
201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 홍보 계획

7. 기대효과(사업성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 효과 기술

8. 사업 참여자 명단

※ 전시기획자와 참여 작가를 모두 기재

※ 전시기획자 등의 주요 참여자는 「개인소개서」를 작성

성명	소속(직책)	성별	연령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휴대폰)	비고

9. 활동실적

※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중 문화예술교류사업 실적을 우선하여 작성

※ 아래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 첨부 가능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장소	기간	참석인원	보조금 등 지원 여부 및 금액
2019							
2018							
2017							
2016							

10. 예산계획

1)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금					
자부담비율	(%)				

※ 자부담은 반드시 보조금 대비 최소 10%이상 편성

2)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항목	비목	합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건비	강 사 비				
	회 의 참 석 비				
	단 순 인 건 비				
	통 역 비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사 업 진행비	물 품 구 입 비				
	임 차 비				
	체 재 비				※ 초청대상자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일비, 교통비 편성
	식 비				
	국 내 여 비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홍보비	인 쇄 비				
	홍 보 비				
	현 수 막				
	.				※기타 필요항목 기재
활동비	송 금 수 수 료				
	특 근 매 식 비				※자부담으로만 편성
	사 무 용 품 비				
	재 료 비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만 편성
	활 동 비				※자부담 우선 편성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로 편성(그 외의 항목 불가)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유의사항

- 지출항목내 동일 건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할하여 편성 불가

【예시 : 리플릿 제작(100만원)을 보조금(5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으로 계상 불가】

-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재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진행)

-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정상적 운영비는 편성 불가(보조금, 자부담 공통)

【단체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관리비 등】

- 일반시민의 부담(교육비, 참가비, 입회비 등)하는 자부담은 사업취지에 어긋나며 불인정

【붙임4】 법인(단체)·개인소개서

【 단체소개서(인천) 】

개 요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종류 () ※ 해당 단체에 한함		설립연도	
	단체구분	<input type="checkbox"/> 비영리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예술단체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유형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증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격에 따른 단체번호 :			
	주 소	(우 -)			
	설립목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활동분야				
일반현황	단체 구성 인원	총()명 = 임원 ()명 + 직원·회원 ()명 + 등록회원 ()명			
	연간예산규모 (개략적 평균)	총()천원 = 예술활동경비 ()천원 + 운영경비 ()천원			
	예산 조달	연간 예산 규모(100%) = 자체 조달 ()% + 외부 조달 ()%			
회원명단 (※정규 회원에 한함)	연번	성 명	직책(역할)	주요활동내용	
보조금 운영 실적 (최근5년)	연 도	사업내용(사업명)		지원기관	

※ 활동실적 작성 시,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 첨부 가능

【 단체소개서(해외초청단체) 】

개 요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국가명 포함)		설립연도	
	설립목적			
	활동분야			
단체소개				
활동실적				
비고				

※ 이 외에 단체 소개자료 제출 가능

【 개인소개서 】

성명	출생연월일		활동지역
역할			
활동분야			
	현재소속단체		
전화번호	() -	이동전화	
주소	(우 -)		
E-mail			홈페이지
주요사항	경 력		
	활동실적		
	수상내역		

※ 주요사항 작성 시,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지 첨부 가능

【붙임5】 서약서

2019 인천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서 약 서

단 체 명

본 단체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46호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공고

지난 5월 30일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주민과 소상공인들께 우리시는 6월, 7월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해드린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8월 수도 사용요금 면제로 일괄 보상하고 일괄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에 대하여는 신청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상기간,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9.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기준 주요내용

□ 보상기간 및 보상지역

- 보상기간 : 2019. 5. 30일 ~ 8. 4일 까지
- 보상지역

군·구	읍 면 동
중구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2,3동, 가정1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2,3동, 가좌1동, 가좌3동, 원당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강화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보상제외 지역

- 서구 제외지역(부평수계지역) : 가정2동, 가좌2,4동, 가좌3동 공장지역
- 강화군 제외지역(상수도 미공급지역) : 서도면, 삼산면

□ 피해보상 원칙

-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주민(소상공인 포함)에게는 3개월분(6,7,8월 사용분) 일괄 보상 시행
- 일괄 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보상 시행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 논란이 없는 저수조 청소비 등은 신속히 보상 진행

□ 항목별 피해보상 세부기준

① 상·하수도요금 면제 : 3개월분

- 적수기간 6, 7월 사용분 면제
- 추가 1개월(8월 사용분) 면제
- ※ 보상제외 지역 및 제조업·대수요가는 보상제외

② 생수 구입비 : 5.30일 ~ 8.4일 까지 구입한 비용

-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③ 필터 교체비 : 5.30일 ~ 8.4일 까지 구입한 비용

- 정수기 및 수도꼭지 필터 구입(교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지원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④ 의료비 : 5.30일 ~ 8.4일 + 1주일 이내 발병까지

- 피부·위장질환 등 사실관계 확인(의사소견서 등) 후, 진료비(약제비 포함), 소견서 발급비용 지원(영수증 등)

㉔ 수질검사비 : 5.30일 ~ 8.4일 內 실시한 수질검사 비용

- 공인인증기관(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서와 수질검사비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

㉕ 저수조 청소비 : 7.26일까지 청소한 비용

-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
 - 저수조 청소비용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지급 할 예정이므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3. 피해보상 신청대상 · 기간 · 방법 · 접수처

- 신청대상 : 공촌수계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
 - 일반주민 :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19. 8.12(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9일간)
- 우편 및 현장방문 신청 : '19. 8.19(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2일간)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신청기간 내 온라인은 24시간 접수
- 2) 우편 신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3층
안전정책과 (우편번호 21554)

※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 3) 현장방문 신청 : 접수처는 14일이후 홈페이지 별도안내 참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안전정책과(본관 301-1호)
- ※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사정상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 장소 마련 예정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APT) : 아파트 관리사무소
- ※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는 '19.8.19(월)~8.25(일)까지 운영
- ※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 신청 접수 및 공휴일, 주말도 접수 가능함(단, 시청은 평일 업무시간에 한 함)
- ※ 현장방문 접수처는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방문전 홈페이지 등의 안내를 확인하신후 방문 바람

4. 신청시 구비서류

① 피해보상신청 및 청구서	③ 의료비 청구(진료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치료비 확인 영수증 등)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④ 피해입증서류(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 구입일시, 구입품목, 구입금액 등 구매내역이 표기되어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접수 불가	⑤ 현장방문 접수인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지참
⑥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⑦ 주민등록 미전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사실 확인서류
⑧ 사업자 등록증 사본(소상공인) ※ 영업손실 청구[최근3년간 매출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세무자료(소득세 또는 부가세 신고서류), 2019년 매출 전산기록(POS시스템), 그 외 매출 증빙자료]	⑨ 대리신청(소상공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지참

※ 우편 접수인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현장방문 접수인 경우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 활용하여 작성

5. 보상절차

- 일괄보상 : 별도의 신청없이 8월 수도 사용요금 추가면제

○ 신청보상 : 일괄보상에 이의가 있는 주민

－ 신청서 제출 →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액 확정 → 개별통지
→ 계좌입금

※ 피해보상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하되, 추가 수도요금 면제금액은 재산정시 감액 고려

※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신청이 당연히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제출한 피해액과 이에 대한 적정하고 공평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중재 등 법적 절차, 전문기관의 손해사정 절차에 따라 보상의 가부 및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영수증 제출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시 원본지참 확인 후 반환

○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접수 가능함

○ 중복신청은 보상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환수 등 법적 조치

○ 피해보상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7. 문 의 처 : 미추홀콜센터(☎120)

【붙임1】

피해 보상 신청 및 청구서(일반주민)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청구) 인

신청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 H.P. :
주 소				읍·면·동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수	

☐ 피해신청내용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			
생수구입비			
필터 교체	정수기		
	수도꼭지		
의료비			
수질검사비			

* 상기 항목외에는 보상 접수 불가하며, 보상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로 결정합니다.

☐ 보상금 입금(청구)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 * 입금계좌는 반드시 실명계좌로 작성, 신청인과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 신청금액 전액 지급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동 피해사고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청구)인

서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절 취 선 -----

피해 보상 신청 및 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_____ 귀하께서 공촌정수장 수돗물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신청(청구)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직인이나 접수자 날인)

※ 총 접수금액 기재할 것.

피해 항목별 구비서류(일반주민)

구 분		상 세 내 역	비고
공통 구비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 미동의시 보상절차를 진행할수 없음 ○ 신분증 : 현장 신청자에 한함 ○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개별 구비 서류	생수구입비	○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및 구매내역이 없는 영수증 접수 불가
	정수기필터 교 체 비	○ 필터교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 교체주기가 도래되어 교체한 필터에 대해서는 보상 불가	
	수 도 꼭 지 필터 교체비	○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의 료 비	○ 진료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치료비(진료비, 약제비, 소견서 발급 비용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수 질 검사비	○ 공인인증기관(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서 ○ 수질검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 구비서류는 피해기간 내(5.30일 ~ 8.4일)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의료비는 8.4일 이후 1주일까지 치료받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저수조 청소비용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처리 할
예정이므로 일반주민이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인터넷 구입(모바일 포함)의 경우 구매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일반주민)

귀하의 정보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한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택, 핸드폰번호), 주소, 상가명(상호), 세대주명, 세대원,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관련 자료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연락처·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2】

피해보상신청서[소상공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신청인			생년월일		
상가주소	(상호명 및 행정동 :)				
업태			종업원수		
대표자명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사무실: H.P:

☐ 피해신청내용

구분		금액(원)	비고
계			
생수구입비			
필터	정수기		
교체	수도꼭지		
영업손실			
그밖의 피해			

* “붙임3” 「피해항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시고, 뒷면의 피해신청내용 추가서식을 활용하여 영업피해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보상금 입금 계좌는 반드시 실명계좌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 보상신청은 대리 신청 가능하나, 보상금은 대표자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9. . .

신청인

서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절 취 선 -----

피해보상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_____ 귀하께서 공존정수장 수도물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신청(청구)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직인이나 접수자 날인)

※ 총 접수금액 기재할 것.

☐ 피해신청내용 추가서식(피해보상신청서 “뒷면”)

구 분	내 용	비 고
피해사항 상세히 기재		

피해 항목별 구비서류[소상공인]

구 분		상 세 내 역	비고
공통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동의서 ※ 미동의시 보상절차를 진행할수 없음 ○ 신분증 : 현장 신청자에 한함 ○ 통장사본(사업자 대표 또는 법인 명의) 	
개별 구비서류	영 업 손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의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소득세 또는 부가세 신고서류) ○ 2019년 매출전산기록(POS시스템) ○ 그 외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간이영수증 및 구매 내역이 없는 영 수증 접 수 불가
	생수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 인터넷 구매의 경우는 구매내역과 영수증 	
	필터 교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교체 내역또는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 정수기필터는 교체주기가 도래되어 교체한 필터에 대해서는 보상 불가 	
	수질검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기관(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서 ○ 수질검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그 외 기타 피 해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기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구비서류는 피해기간 내(5.30일 ~ 8.4일)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저수조 청소비용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처리 할 예정
이므로 일반주민이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인터넷 구입(모바일 포함)의 경우 구매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상공인]

귀하의 정보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한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택, 핸드폰번호), 주소, 상가명(상호), 상가주소,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관련 사항,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열람)

- 소상공인 보상협의체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또는 민사소송절차 개시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허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관련 자료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연락처·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29호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택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기능, 위탁,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마을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마을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주택관리소”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주거환경정비”란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과 그 주변의 시설물을 개량·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

을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집수리 진단”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전문가가 구조, 안전, 전기 및 설비 등 분야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정보제공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이하 “집수리 서비스”라 한다) 제공 및 지원
2.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
4.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5.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6.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

7.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한 사항

제5조(마을주택관리소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기본방향

2.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법 등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확대 운영방안
2.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등 관리체계
3.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에 관한 내용
4.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층주거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마을주택관리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지원 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9조(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2.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제10조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주택개량비용 지원)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 및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2.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의 수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시장방침

－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주거환경정책관-9600(2014. 12. 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③항5호(주택개량의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5년부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개시

○ 2015 ~ 2019: 5년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예산 2,040백만 원 편성

○ 2019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으로 1,430백만원 편성

－ 시비/군·구비 5:5매칭사업

－ 시비 715백만원 편성(기금)하였으나 군·구비 미확보로 283백만원 교부잔액 발생 예상

○ 2019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집행현황과 2022년까지 최소 20개소 추가설치 운영을 고려하여 추계산정

나. 추계 결과

○ 7,000,000천 원(시 3,500,000,000/구 3,500,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지원(주택개량의 지원)

○ 2020년부터는 마을주택관리소 일반예산 지원 요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주거재생과장 권혁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 △ △ △ △ △						
	소계						
세출	△ △ △ △ △ △ △ △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7,000,000
	소계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7,000,000
재원 조달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군·구비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0호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input type="checkbox"/>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input type="checkbox"/>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p>“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해당사항 없음”</p>
특이사항	<p>“해당사항 없음”</p>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지역"이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4·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

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1. 비용 발생 요인**

-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는 경우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세월호 관련 시민 안전의식 증진사업에 예산의 증가 요인은 있으나,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유 제1호에 해당함.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우 성 훈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1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으로 수혜대상을 변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 장학금액 등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 수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장학금의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을 정비함(안 제3조)
- 장학생 선발 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하도록 함(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esungle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새마을지도자”로,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를 “유자녀”로, “중·고등학생(단, 의무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도자경력”을 “새마을지도자 경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부새마을지도자”를 “부부 새마을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 성적으로 같음한다.

가.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대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

제3조제1항제3호 중 “특기생장학생”을 “특기생 장학생”으로, “자.”를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때에는 장학생을”을 “때에도 장학생은”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구지회장은 군·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을 “군·구지회장은 군·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를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상순위”를 “높은 순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 중 “지역새마을지도자수”를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제7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을 “범위에서 공납금을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 본문 중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도자직”을 “지도자 직”으로 한다.

제12조 중 “장학금기준액”을 “장학금 기준액”으로, “시달하여야하며”를 “시달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단, 의무교육 대상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 (목적) ----- <u>인천광역시</u> <u>시</u> ----- ----- <u>새</u> <u>마을지도자</u> ----- ----- ----- <u>유자녀</u> ----- ----- -- <u>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u> ----- ----- ----- ----- -----.
제2조 (장학금의 종류) <u>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u>	제2조 (장학금의 종류) <u>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u> ----- -----.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u>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여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u>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u>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새마을지도자 경력</u> ----- -----.

현행	개정안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u>부부새마을지도자</u> 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 ----- ----- <u>부부 새마을지도자</u> ----- ----- ----- -----
2. <u>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u>	2. <u>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u> <u>가.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u> <u>나. 대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 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u>
3. <u>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u>	3. <u>특기생 장학생</u> ----- ----- ----- <u>학생으로</u> <u>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u>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장학생을 지도자 1인	② --- <u>각 호</u> ----- -- <u>때에도 장학생은</u> -----

현행	개정안
<p>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p> <p>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군·구지회장(이하 "군·구지회장"이라 한다)과 군수·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지회장은 군·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p> <p>제5조 (선발) ① 시지부회장이 군·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p>	<p>----- 한다.</p> <p>제4조 (추천) -----</p> <p>-- 새마을운동중앙회 -----</p> <p>-----</p> <p>-----</p> <p>-----</p> <p>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p> <p>----- . ----- 군·구지회장은 군·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p> <p>제5조 (선발) -----</p> <p>-----</p> <p>----- 다음 -----</p> <p>-----</p> <p>-----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p> <p>-----</p> <p>1.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p>

현행	개정안
<p>의 자녀</p> <p>2. 새마을유공 표창 중 <u>상순위</u>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p> <p>3. 4. (생략)</p> <p>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구당 <u>지역새마을지도자수</u>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p> <p><u><신설></u></p> <p>제7조 (장학금) <u>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u> 다만, 예산의 <u>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u> 지급할 수 있다.</p> <p><u><신설></u></p> <p>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구청장과 군·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u>개시후</u>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p>	<p>-----</p> <p>2. ----- <u>높은 순위</u>-----</p> <p>3. 4. (현행과 같음)</p> <p>제6조 (장학생의 정원) ① ----- <u>지역 새마을지도자 수</u>-----.</p> <p>② <u>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u></p> <p>제7조 (장학금) ① <u>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u> -- <u>범위에서 공납금을 조정</u> --.</p> <p>② <u>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u></p> <p>제8조 (장학금의 지급) -----</p> <p>----- <u>개시 후</u> -----.</p>

현행	개정안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
제9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의 정지) ① ----- ----- 언 느 하나----- 해 당 ----- -----.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u>지도자직</u> 을 사퇴하거나 해촉된 경우	1. ----- <u>지도자 직</u> ----- --
2. 삭 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시장과 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u>장학금기준액</u> 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군·구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군·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군·구에 <u>시달하여야 하며</u> 시의 예산은 군·구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 ----- <u>장학금 기준액</u> ----- ----- ----- ----- ----- ----- ----- <u>시달하여야 하며</u> -----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p>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p> <p>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p> <p>01. 사회보장적수혜금</p> <p>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p> <p>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p> <p>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p> <p>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p> <p>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p> <p>02. 장학금 및 학자금</p> <p>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p> <p>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p> <p>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p> <p>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p> <p>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p> <p>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 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p> <p>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p> <p>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p>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발생요인 :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로서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재적학년 50/100 성적 이내 또는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자),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2. 비용 추계결과(2020년도)

가. 추계의 전제

1) 고등학생 장학금(1학년) : 120,000천 원(150명x800천 원)

☞ 고등학생 의무교육 실시(2020년 2~3학년 /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체)

2) 대학생 장학금 : 98,880천 원(103명x960천 원)

☞ 고등학생 등록금액의 120% 반영

3) 예산 소요 추정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자치 단체 경상보조금 (학자금)	224,000	224,000	208,000	218,880	시 비 (3년평균 예산액)

☞ 시기(재원) : 상·하반기 2회(시비 50%, 군·구비 50%)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2020년~2024년) : 1,094,400천원(년 약 2.1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소통협력관실 민관협치담당관 박재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	-	-	-	-
세출	등록금	218,880	218,880	218,880	218,880	218,880	1,094,400
	소계	218,880	218,880	218,880	218,880	218,880	1,094,4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218,880	218,880	218,880	218,880	218,880	1,094,400
	일반회계	218,880	218,880	218,880	218,880	218,880	1,094,4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